

# 가상자산 관련 형사처벌 사례

2020. 12. 17.

CHA & KWON

차·권 법률사무소



### 차상진 변호사

- 차앤권 법률사무소 파트너 변호사
- 은행법학회 상임이사
- 대한변호사협회 세무변호사회 이사
- 금융투자교육원 강사(한국거래소 및 유지투자증권 강의)
- 핀테크지원센터 멘토
- 서울시핀테크랩 멘토
- 한국예탁결제원
- 국세청

[sjcha@chakwon.com](mailto:sjcha@chakwon.com)

02-3495-0930

## 1. 형사절차 개관

- **(범죄 인지)** 수사기관은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범죄를 인지. 과거에는 주로 가상자산에 대한 고소, 고발 등을 통한 인지 사례가 다수, 최근에는 다양한 정보원을 통하여 자체적으로 범죄행위를 인지하는 경우가 증가
- **(내사단계)** 수사의 전 단계로서 자체적인 범죄인지를 하는 경우 내사를 통하여 일정한 행위가 범죄인지 여부를 확인  
형사소송법적으로는 사실상의 수사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수사로 판단하나 실무적으로는 사건번호 부여가 기준
- **(수사단계)** 범죄의 혐의유무를 명백히 하여 공소의 제기와 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범인을 발견·확보하고 증거를 수집·보전하는 수사기관의 활동(실무적으로는 사건번호가 부여되면 수사로 판단하므로 고소 또는 고발 시에는 수사)
  - 경찰단계의 수사와 검찰단계의 수사로 구분
  - 경찰 v 검찰 수사단계에서 진술조서는 증거능력에서도 차이가 있지만 실무적으로는 진술 시 이루어지는 질문, 시간 작성자의 작성 방식에도 차이(기관의 특성, 작성자)
- **(공판단계)** 검사의 공소제기에 따라 유죄의 여부를 법원이 판단하여 판결

## 1. 형사절차 개관

- (수사단계에서의 주의사항) 수사기관의 기본적인 상황에 대하여 이해하고 수사단계를 접근할 필요
  - 수사관은 사건에 대하여 기소/불기소종결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중립적(불기소/기소 어느 한쪽의 유인 부존재)
  - 고소인진술 전에 사건번호는 등록되며 사건번호에 기재된 모든 자료에 대하여 수사 보고서의 첨부자료로서 자료를 하드카피로 편철하여 작성 필요
  - 고소인의 일정한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요청에 대하여도 편철을 하여야 하므로 일정한 방식의 수사가 필요한 경우 이에 대하여 요청 가능(그러나 수사관이 이를 수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. 요청 수용 v 불수용)
  - 수사는 공소의 제기와 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범인을 발견·확보하고 증거를 수집·보전하는 수사기관의 활동이므로 유/무죄를 판단하는 법원의 재판절차와는 차이가 있음을 인식할 필요(investigation)
  - 수사관이 범죄성립가능성(유/무죄)에 판단을 하고 질문할 수도 있으나 조사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도 존재
  - 진술의 일관성 유지를 위하여는 사건에 고소장 또는 입회준비자료를 기초로 자신이 파악하고 있는 사실관계 및 개별 쟁점에 대한 답변 대하여 충분히 숙지(사전 준비 필요)

## 2. 가상자산을 이용한 범죄수익 취득

- (가상자산을 이용한 범죄수익 취득, 은닉 등) 가상자산을 이용하여 범죄수익을 취득 또는 은닉하려는 시도는 꾸준히 존재 그러나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많은 처벌사례 존재

<https://www.coindeskkorea.com/news/articleView>

### "비트코인으로 아동음란물 거래" 310명 검거 - CoinDesk Kore...

2019. 10. 17. — 비트코인으로 아동음란물 거래" 310명 검거. 다크웹 '웰컴 투 비디오' ... 손씨가 벌어들인 4억여원의 암호화폐도 몰수됐다. 손씨의 재판이 진행되던 ...

<https://www.yna.co.kr/AKR20190519038000004>

### '비트코인 10년' 악용 우려 현실로...마약·협박범죄에 단골 등...

2019. 5. 20. — 비트코인 마약구매 잇따라 적발...한국교민 납치범도 암호화폐 요구. 전문가 "범죄 악용 막기 쉽지 않아...통제장치 필요". [연합뉴스TV 제공].

<https://www.coindeskkorea.com/news/articleView>

### 경찰청 "암호화폐 추적 시스템 자체 개발해 시험중" - CoinDes...

2019. 10. 30. — 최 총경은 "마약 거래, 아동성착취물 거래, 그리고 국내에선 아직 드러난 사례가 없는 총기 거래를 비롯한 다크웹상의 불법거래 대부분이 가상화폐를 ...

<https://www.coindeskkorea.com/news/articleView>

### 체포된 딥닷웹 운영진, 비트코인으로 자금세탁 - CoinDesk ...

2019. 5. 9. — 검찰은 이번 사건을 '딥닷웹 뇌물 사건'으로 정의하며, "체포된 두 ... 을 추적하기 어렵게 암호화폐 거래소 오케이코인(OKCoin)과 크라켄(Kraken), ...

#### [사례 예시]

- 20\*\*. ~ 20\*\*. 딥웹(Deep Web)을 통하여 마약을 거래하고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거래하여 대금을 결제, 결제된 대금은 거래소를 통하여 현금으로 바꾸어 출금 후 배달책을 통하여 배달
- 경우에 따라서는 믹싱을 하는 경우도 존재

### 3. 보물선 사례

- (가상자산을 이용한 범죄수익 취득, 은닉 등) 가상자산을 이용하여 범죄수익을 취득 또는 은닉하려는 시도는 꾸준히 존재 그러나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많은 처벌사례 존재

<https://news.sbs.co.kr> > 사회 > SBS 단독보도 > 8뉴스 ▼

#### [단독] '보물선 가상화폐' 백서 보니..."조잡한 짜깁기 수준" ..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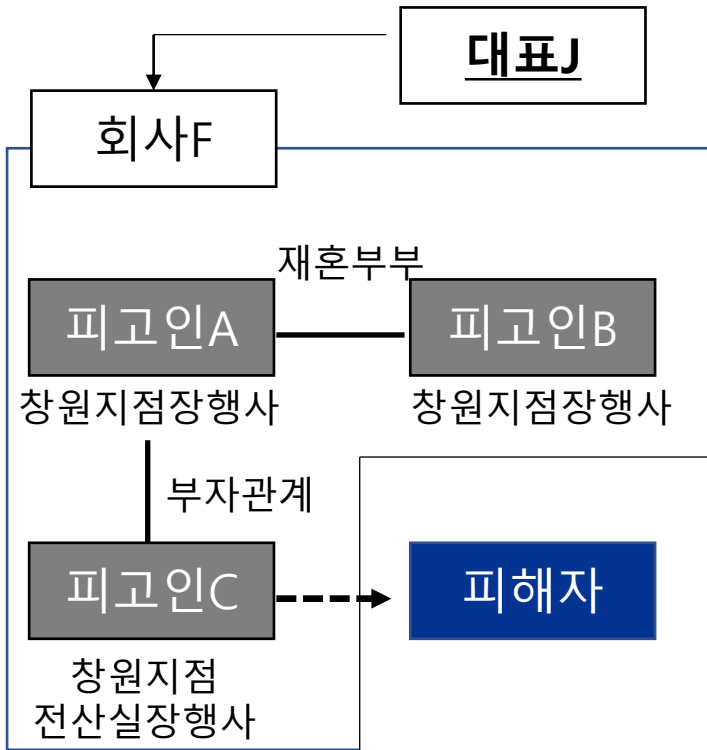
2018. 9. 27. — 보물선을 인양하겠다면 그걸 담보로 가상화폐를 발행한 걸 경찰이 사기로 보고  
수사하고 있는 가운데 해당 업체가 그 가상화폐 백서를 오늘밤 ...

피고인들은 150조원의 보물이 실려 있는 체 침몰한 돈스코이호를 인양할 계획이며, 인양에 성공할 경우 A그룹이 판매하는 암호화폐인 A골드코인을 구매하면 수익금을 배당받을 수 있다고 홍보, 다단계 조직을 통하여 이를 판매

※ A그룹(돈스코이 함 탐사 및 인양), 싱가포르A그룹 (가상화폐 발행) A그룹돈스코이호국제  
거래소(가상화폐 거래) 설립

-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(1) 2018.04. 암호화폐 판매,           | (2) 2018. 06. A그룹. 자본금 1억원으로 설립 |
| (3) 2018.07.17 A그룹 보물선 발견 기사 배포 | (4) 2018.09. B그룹 설립(금광 코인 발행)   |
| (5) 2018. 11. C그룹 설립(리조트 코인 발행)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### 3. 가상자산 AI트레이딩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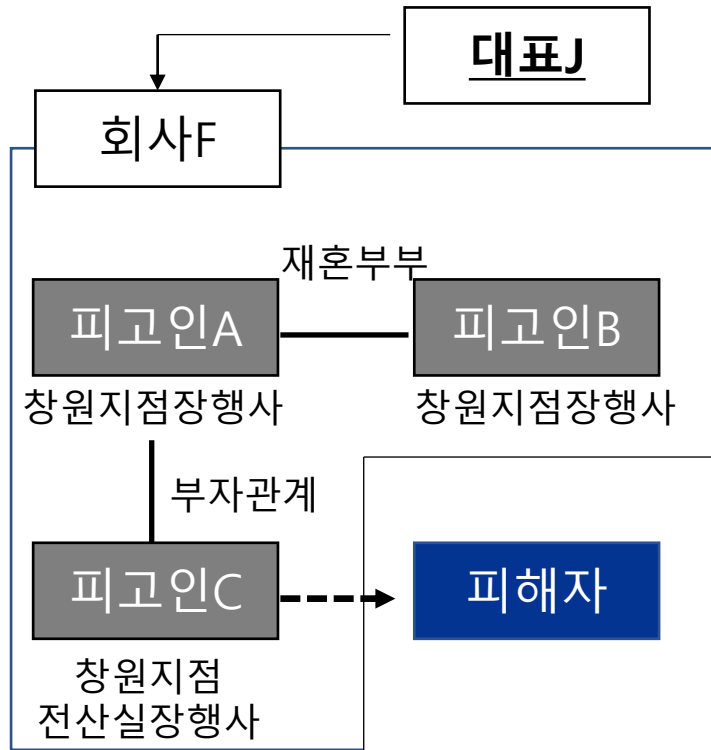
**[피고인들의 행위]** C는 2017. 9. 12.피해자(G)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을 진술하며 자금을 수취

파나마에 본사가 있는 F는 인공지능컴퓨터(AI)로 자동 트레이딩을 하여 전 세계 600개 거래소 중에서 제일 싼 가격으로 비트코인을 사서 제일 비싼 가격으로 팔기 때문에 원금 손실이 발생하지 않고, 향후 엄청난 수익 가능

F에 투자(1계정 당 120만원)하면 매일 수익으로 5\$~10\$(한화 7,000원에서 12,000원 상당)를 300회에 걸쳐 각 투자자들의 F 계정에 적립시켜 주고, 언제든지 원하는 때에 현금화 가능

후순위 투자자를 F에 투자하도록 추천하면 추천 및 후원수당을 선순위 투자자의 계정에 달러로 적립하여 더 많은 수익 가능

### 3. 가상자산 AI트레이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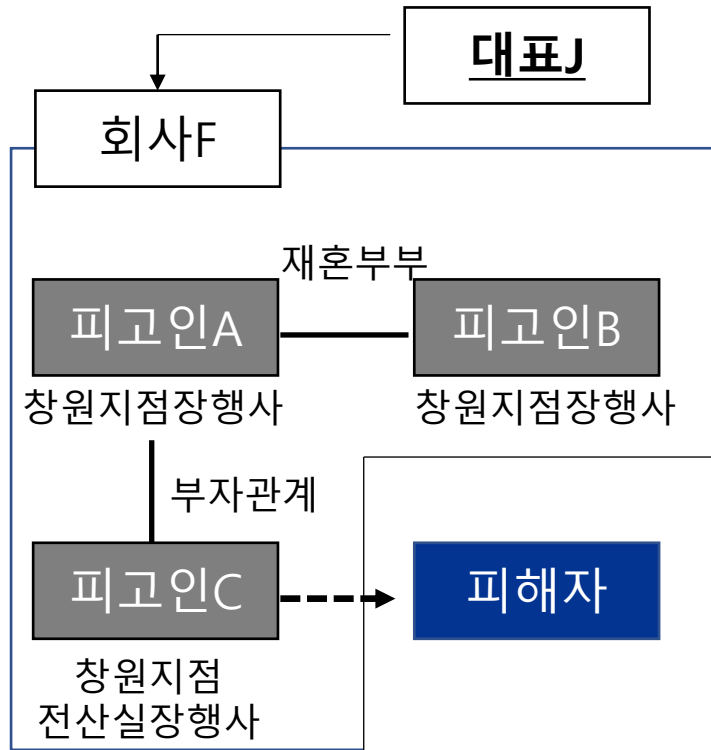


[범죄사실] AI트레이딩을 이용 원금 및 수익을 줄 의사나 능력 없음

- [1] F는 상위사업자의 초대를 통해서만 가입할 수 있는 계정 및 수익금 관리 사이트(H) 운영, 그 외의 실체는 파악 곤란
- [2] 위 인공지능컴퓨터를 이용한 비트코인 거래가 가능한지, 위 거래를 통하여 투자위험을 분산하면서 위와 같은 수익의 창출이 가능한지 검증된 바가 부존재
- [3] 회원별 계정 및 수익금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나 달러로 표상되는 수익금은 정상적으로 통용되는 가상화폐와 달리 채굴의 방법으로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전산상의 수치인 이른바 '포인트'에 불과한 것일 뿐 그 자체로는 무가치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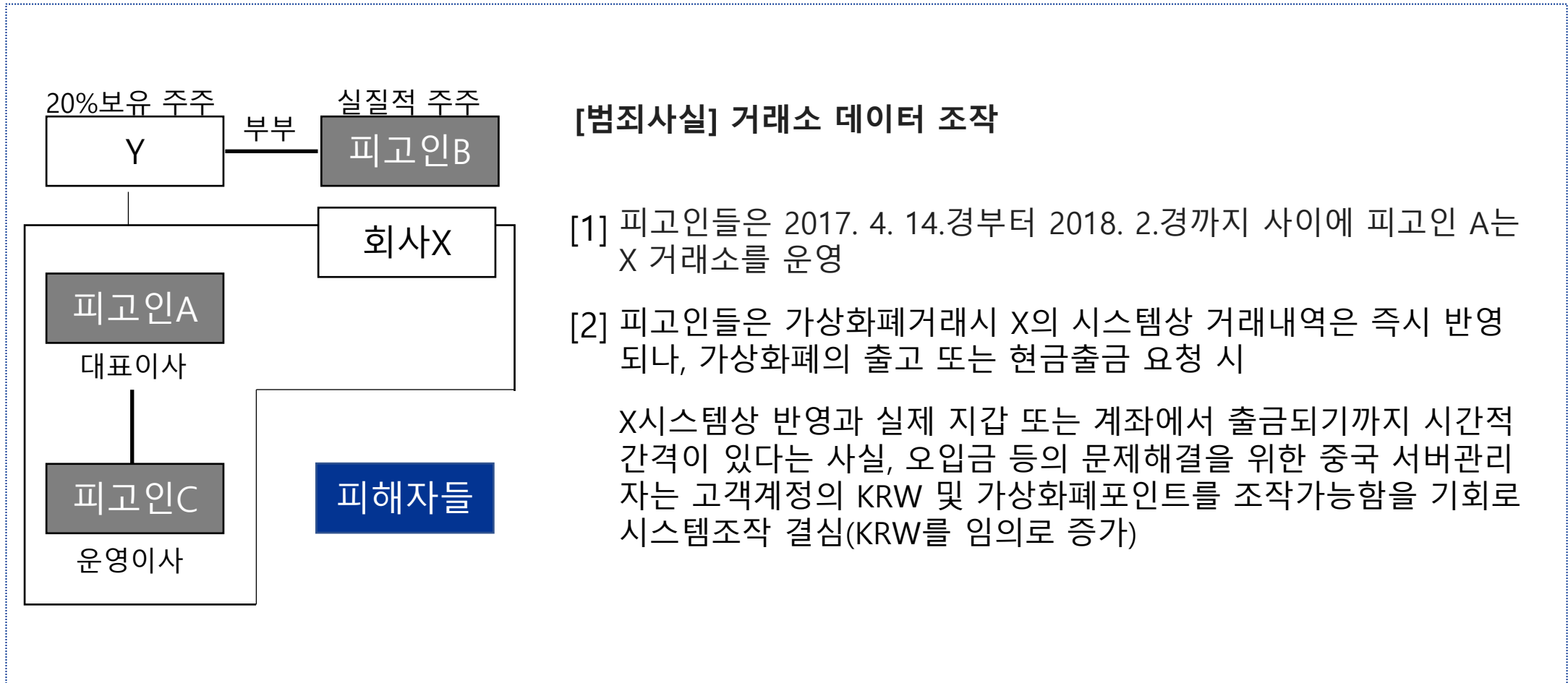
### 3. 가상자산 AI트레이딩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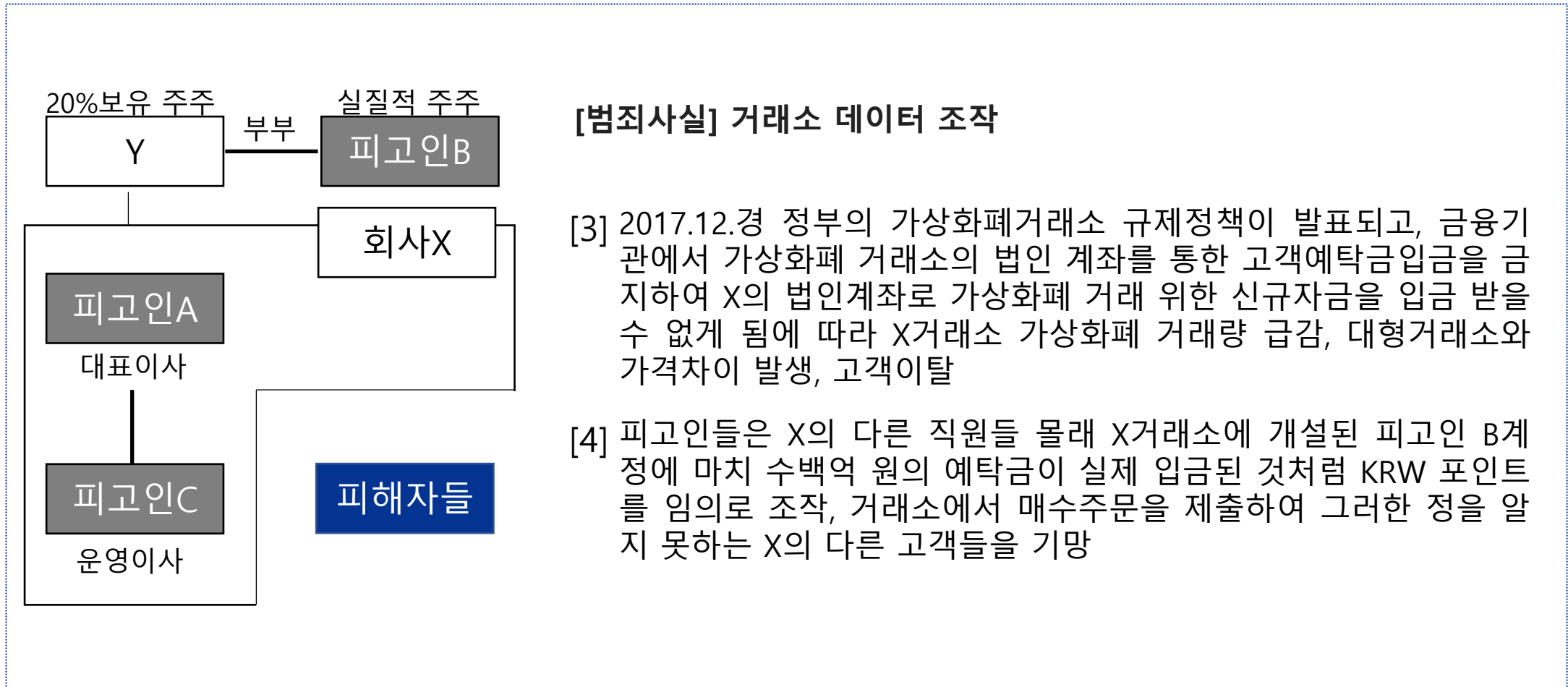
[범죄사실] AI트레이딩을 이용 원금 및 수익을 줄 의사나 능력 없음

- [4] 특히 2017. 7.경 개최된 전국 지점장 회의에서, F의 설립자(J)는 각 지점이 투자금을 보유하면서 수익환급요청시 알아서 돌려막기 형태로 지급하라는 지시 또는 안내
- [5] 2017. 10. 30.경 위 J가 사기 등으로 구속되었음에도 위 F 투자사업의 실체를 확인, 수익구조를 밝혀 자신들이 유치한 투자자들의 투자위험을 감소시키려는 노력 부존재
- [6] 투자자로부터 투자금명목으로 교부받은 금원 중 대부분은 환급을 요청한 투자자들에게 지급하거나 생활비로 사용

## 4. 거래소 데이터 조작



## 4. 거래소 데이터 조작



## 5. 시사점

- **(처벌 시 근거규정)** 가상자산을 위한 자금조달 부분에 대하여는 사기 또는 유사수신행위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이 다수 그 외 개별 사안에 따라 배임, 횡령, 사전자기록등위작 등이 쟁점화
- **(수사기관)** 가상자산을 위한 자금조달 행위 자체 대하여는 사업의 현실적인 가능성 검토하여 사기 또는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여부를 판단
- **(법원)** 사업의 현실적인 가능성을 고려하나 사기죄 판단에 높은 비중을 두는 경향 존재
- **(시사점 1 : 백서 및 사업내용의 중요성)** 사업내용이 불분명하고, 실체가 없어 사업의 현실적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사업의사가 없다고 볼 수도 있으므로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사업(사업적, 법률적, 회계적) 백서에 기재
  - 사업의 현실적인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투자자의 요청에 따라 투자금을 반환하여 준 행위에 대하여도 “돌려막기”로 판단될 수도 - 사업의 현실적 가능성이 없어 신규투자자의 자금으로 기존투자자에게 반환
  - 급여를 수령하는 경우에도 사업 내용 자체가 부실할 경우 가상자산발행을 통하여 조달한 자금에서 수령하는 경우 범죄행위로 판단될 수도

## 5. 시사점

- (시사점 2 : 변화) 종전과는 다른 접근방법을 통하여 사안 인식

구분	종전	최근
복수법인	• 비교적 쟁점화 미약	• 투자자들의 법인혼동 위험
가상자산자금조달	• 가상자산의 매매로 인식하는 경향이 비교적 우세	• 다양한 접근방법을 통하여 범죄 행위로 인식하는 경우도 존재
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백서기재의 효력	• 법적구속력이 없으므로 범죄의 성립가능성을 상당부분 완화	• 부실한 백서는 애초부터 정상적인 사업의사가 없었다는 자료로 인식
실질적인 사업 의사	• 실질적으로 사업진행이 거의 없는 경우 범죄성립을 인정하는 경향	• 실질적으로 사업진행이 거의 없는 경우 범죄성립 인정 • 사업구조 자체가 현실적 가능성이 없는 경우 사기(또는 유사수신)
투자손실 가능성 고지	• 투자손실가능성을 안내한 경우 처벌(유사수신행위, 사기)가능성 완화  • 투자손실가능성을 안내한 경우 처벌(기망)가능성 완화	• 설명된 사업구조 자체적으로 수익 발생할 수 밖에 없다면 그 자체로 원금보장 및 이익 보장(유사수신) • 설명된 사업구조와 다른 사업(현실적 진행이 없음)을 하였으므로 기망(사기)

## 5. 시사점

- (그 외 : 가상자산 관련 범죄 고소 및 수사) 수사기법의 발달 및 가상자산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과거보다 효율적이고 정밀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현실적인 한계(가상자산산업의 빠른 변화, 한정된 수사자원)도 존재
  - 현재 가상자산은 개별 지갑의 이용자에 대하여 지갑주소 자체만으로는 알 수 없으므로(은행계좌와 차이) 고소인으로서의 자신에게 피해를 입힌 자가 누구인지 특정(누구이며 어떤 지갑을 이용)하는 것이 필요
  - 효과적인 범죄발생 및 피해사실 증명을 위하여는 가상자산의 거래내역 및 이동흐름을 수사기관에 제공할 필요가 있으나 수사기관의 한정된 수사자원 고려 시 수사기관 스스로 모든 증거수집을 기대하는 것은 곤란
  - 거래장부가 공개되는 가상자산은 지갑주소 파악 후 해당 지갑과 거래가 이루어진 지갑에 대하여 추적 및 파악 가능(Etherscan 등) - 관련 솔루션(보안업체, 블록체인스타트업 등이 제공)도 존재
  - 지갑 간 거래내역 파악 후에는 해당 지갑의 소유자 파악 필요.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가 필요한 경우가 다수이나 민사소송이 진행중인 경우 법원을 통하여 파악하는 것도 가능

감사합니다.

CHA & KWON

차·권 법률사무소